



權寧海 국방부차관

1979년 1월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 창간호를 선보인 본誌가 이번호로 창간 14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특별기획으로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權寧海 국방부차관과의 인터뷰를 꾸몄습니다. 애독자 여러분들의 一讀을 바라며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편집자 주)

최근 중국과 일본의 대폭적인 군비증강 등 아시아 각국이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변 안보상황의 변화와 함께 우리 방위력의 현주소에 대한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에 대한 평소 持論을 말씀해 주시지요?

창간 14돌을 맞아 본인과 인터뷰를 꾸며준 편집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 기회를 빌어 월간 <국방과 기술> 애독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나라가 自主國防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독자적인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와같은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과 독자적 과학기술입니다.

물론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군사과학에 대한 것을 완전히 자기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장

핵심적인 기술만은 그 나라 고유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군사 과학적인 면에서 자주성이 확립된다고 봅니다.

셋째, 국민과 軍이 자주국방을 해야 되겠다는 일치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크게 볼 때 이 3가지가 확립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한 나라가 자주국방을 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국방의 3대 요건중 두번째 지적하신 국방과학기술에 대해 좀더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국방과학 면에서 우리나라가 독자성을 주장할 정도로 기반이 구축되어있고, 투자가 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솔직히 노력은 많이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육성해 나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내 국방과학기술의 현실을 보시는 시각과 함께, 기술도입 등 해외 기술협력과 연계하여 우리의 문제점과 방향을 말씀해 주시지요

한 나라와 다른 한 나라가 防産기술을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업적인 거래 차원을 넘습니다. 일례를 들어 과거 몇년 전까지만 해도 공산진영의 무기가 아무리 싸고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무기가 어느 때 쓰기 위한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해답이 찾아져야 합니다.

결국 무기는 국가 위기시에 쓰는 것인데, 최악의 경우 국가적인 위기상황하에서 과연 저쪽 나라가 안보에 대한 정책을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가 구축되어 있는 나라냐,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 무기를 선택하고, 안하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경제難 등으로 인하여 러시아製 무기가 국제시장에서 바겐세일이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런것을 안 사오느냐, 그런쪽의 기술을 왜 좀더 적극적으로 이전받지 못하느냐 하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선불리 할수 없는 것은 과연 안보상 결정적인 순간에 러시아가 우리하고 안보정책을, 죽고 사는 문제를 서로 같이 할수 있는 정도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중국어하고도 국교가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중국과 방산이나 군수를 협력할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는 안보 등 정책적인 면에서 이미 특수한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기나 장비, 군사기술도 필연적으로 깊이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외 로부터의 기술이전과 관련해서는 우선 한국전투기사업(KFP)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전을 위해 어려운 예산환경속에서도 직구매보다 10억분의 사업비를 더 투입하면서 기술도입생산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업을 일본도 FSX라 칭하여 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게 첨단기술을 이양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신예전투기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소화해낼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이며, 비애(悲哀)입니다.

이는 쉬운 예로 어린아이에게 영양가가 높다고 하여 비프 스테이크를 준다해서 소화해 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기술패권주의의 波高와 함께 기술개발이 초미(焦眉)의 국가적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기술개발을 선도해온 국방과학기술의 발자취와 향후 발전계획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학문 (學問)적으로 볼때 그동안 우리의 모든 교육이 입시(入試) 위주로 흐르다 보니, 과학기술도 기초과학 부분이 가장 취약합니다. 국방관계도 기초과학이 약하기 때문에, 그동안 國科硏에서 외국의 것을 모방생산하거나 역설계 등을 통해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까지 국과연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고도정밀화된 것까지 전부를 추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학저변을 확대하고, 기초를 잘 쌓기 위해서는 산·학·연간에 역할 분담을 잘해야 합니다.

즉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각 학교 연구기관이나 민간 연구기관에서 수행해야 하고, 모험적이고 첨단적인 것,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이 될만한 것은 국가기관인 國科硏(ADD)이 수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방환경, 특히 국방비의 획득이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요구와 맞물려 점점 어려워져가고, 또한 국방과학기술이 산·학·연과 연계를 강화할수 밖에 없는 측면을 고려할때, 역할 분담이 잘 되어야만 발전할수 있을 것입니다. 產·學·硏과의 共助 및 연계는 국방부의 장기적인 목표이며, 저도 평상시 이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국방연구개발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진 우리의 현실을 볼때, 他 정부부처와의 연계에 의한 총체적인 투자의 고려나, 국방연구개발비의 대폭적인 上向조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愚料됩니다

현재 우리의 국방 연구개발비가 액수면에서 상당히 적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또 이의 점진적인 개선을 위해 분명히 투자를 늘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비 획득의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증가시키고 싶어도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비만 가지고 하려면 국방연구개발 소요를 다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연계를 가질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공부나 과기처 특히 과기처 산하의 KIST 같은데는, 원장인 徐廷旭 박사가 과거 ADD에서 근무한 적도 있기때문에 人的구성 자체가 국방부와 협력할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 국책 연구기관의 長을 국방연구개발의 어려운 현실을 잘 아는 분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국방연구개발의 主役인 방산업체들이 전환기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식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더욱 심하며, 전체적으로 방산업계의 가동률이 크게 저하(低下)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주국방과 국가경제 발전에 진력(盡力)해온 방산업체 대표 및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 국방부에서도 어떻게 현재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근 주요 방산업체 長들과 더불어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탄약이나 小火器類 등을 주로 생산하여 防産 의존도가 높은 업체일수록 문제가 더욱 깊었습니다.

재래식 무기라는 것은 언젠가는 한정된 수요가 끝나게 마련이며, 이들 업체를 위해 무한정 생산할수는 없습니다. 방산물량이 감소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수용하면서, 이제는 업체도 민수 부문과 共用으로 생산할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나가야 합니다. 다만 급격한 물량감소나 계획의 돌발적인 변경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정부가 정책을 立案할때 업체를 참여시켜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업체를 특별히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눈총을 의식하여 정부의 관리들 위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이는 업체는 이익추구집단이므로 업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다 「않는 소리만 한다」는 시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思考로는 문제해결을 같이 할수 없다고 봅니다.

국방부 에서 앞으로는 매년 2회정도 업체와 한자리에 모여서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代案을 마련하고, 특히 中·長期 계획에 물량의 현격한 감소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조정하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동률이 30%정도 밖에 안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업체가 어느정도의 물량이 있어야만 손익분기점과 최소한의 생산라인 유지가 되느냐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이에 맞도록 획득계획을 맞춰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시물량은 적지만 전시(戰時)물량을 대비해서 유지시켜야 할 적정 생산시설을 판단하여 유지를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같은 것은 과거의 前例에 비추어 매우 획기적인 정부의 인식과 자세의 전환이라 할 것입니다.

장차를 대비하여 핵심 국방정책의 재정립을 위해 인력관리와 정보, 국방과학기술의 현대화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과학기술 현대화 추진과 관련하여 小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국가 과학기술의 총체적인 집대성이 국방과학기술과 첨단무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선도해 나가야 하겠다는 의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너무 무리가 되는 커다란 사업보다는, 작은 것이지만 핵심적인 것, 우리나라만 가질수 있는 기술과 부품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연구개발에 관한 장기계획이 몇몇 사람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끌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각軍과 기관, 국방부가 합동으로 장기적인 연구개발의 목표 기획에서 연구계획 수립, 연구요원 확보, 연구비의 획득 등을 함께 수립하는 共助의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한국형 무기체계, 핵심기술, 부품 등에 관해 많은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으며, 일본이나 이스라엘 등이 例示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연구개발 정책이 주요 핵심기술 개발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성품을 기준해서 본다면 어느 부문으로 지향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사력, 戰力이라는 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력을 보통 地上·海上·航空전력으로 구분을 하는데, 어느 한쪽도 균형이 깨져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어떤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간다고 한마디로 규정짓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6·25때 우리는 적의 전차에 혼이 나 대전차 무기에 집중했고, 적은 연합군의 항공기에 혼이 나서 야간 전투와 지하시설, 방공무기에 집중했듯이, 무기체계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여 본다면, 통일 이전까지에 우리의 상대는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이 갖고 있는 군사력과 군사전략, 전술에 중점을 두어 이에 상응한 국방과학 무기체계를 발달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굳이 중점을 둔다면 최근의 걸프戰 등에서도 볼수 있듯이 앞으로는 電子부문에 관한 연구에 더욱 몰두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국형 무기체계나 핵심기술, 부품 등 自主國防의 기반은 방위산업의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고 봅니다. 오늘날 방위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근무하는 인력의 전문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思料됩니다. 현재의 短期순환 보직 등 여러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腹案이나 노력을 表明해 주시지요?

이 문제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똑같이 안고 있는 難題입니다. 특히 국방부 입장에서는 현역들을 많이 보직시키고 있기 때문에, 진급이나 인사관리 등이 가장 취약한 사안중의 하나입니다.



국방과학기술은 産·學·研·官의 역할 분담이 잘 되어야만 발전할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국방부의 長期적인 목표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아 전문화와 특수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인사관리 및 승진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관리해 놓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편중된 경험과 직무 지식으로 인해 상위직으로 진출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따라 전문분야의 선호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직종이나 특수직종에서도 적절하게 上位職으로 진출할수 있는 인사관리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이것이 뒤따르지 않는한 아무리 고급인력을 양성하려 해도 안될 것입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돈을 조금 적게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人力관리를 잘하면 자금투입 이상의 훌륭한 성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사람이 보람과 의욕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맡겨 놓아야 합니다. 더이상 애국심과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

(對談 : 김영태 편집장, 사진 : 안상남 기자)